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-15호

『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월 28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

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지원금을 둘째자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,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산장려지원금은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지원하는 금액으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의2).
- 다.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의3).
- 라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2조의4).
- 마.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.

바. 출산장려 및 양육 관련 시책에 공헌한 자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11조).

사.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.

3. 의견제출

가.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복지환경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02-789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(전화 042-600-5327,
FAX 042-600-5039, E-mail : kimcs4612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셋째자녀”를 “둘째자녀”로 하고, 같은 조제4호 중 “대전광역시”를 “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시장의 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시민의 책무) 시민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4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원대상 및 지원기간) ① 출산장려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금) 시장은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 중 “대전광역시”를 각각 “시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기관·단체 등 지원) ① 시장은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등은 「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1.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자
2.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 및 사업체
3.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 관련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고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“출산장려지원금”이라 함은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신청인”이라 함은 영유아와 함께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.</p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…………… 둘째 자녀 ……………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……………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……</p> <p>제2조의2(시장의 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제2조의3(시민의 책무) 시민은 출산을 저하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2조의4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는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가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</p>

제3조(지원대상 및 지원기간) ①출산장려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대리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양육지원금은 대전광역시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24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금)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비용부담) 출산장려지원금은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고, 양육지원금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50을, 자치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.

〈신설〉

제3조(지원대상 및 지원기간) ①출산장려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에게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.....시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제4조(지원금) 시장은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비용부담).....

시.....

.....시.....

.....

제10조(기관·단체 등 지원) ①시장은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등은 「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11조(포상)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자2.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에 이바지한 단체 및 사업체3.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 관련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
--------------------	---

관 련 법 령

□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, 제21조, 제22조

제8조 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1조 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혹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·출산·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·부자가정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2조 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,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·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

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